

업무계획

글로벌 스탠더드 기반 확충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0~3

1. 2009년 정책목표

2. 2009년 중점 추진과제



1. 안전 코리아 전략

사전 예방적 제품안전관리 기반구축

안전관리 대상 외 제품도 안전성조사 및 행정조치기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선제적인 중·장기 제품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제품안전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 ▶ 제품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규제 합리화,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등

FTA 확산에 따른 다양한 위해 제품의 수입 전 차단을 위해 국가간 「위해정보 사전통보 시스템」 구축.

- ▶ 중국, 동남아산 저가 위해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OECD, APEC과 협력체계 구축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행정조치)을 위한 제도마련

시판품 조사결과 의견공표 및 제품리콜 등 행정조치 강화

*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수거, 파기 및 언론공표로 시장에서 퇴출 유도

불량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시·도의 행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치경과의 의무 통보 추진

* 「전기제품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 근거 마련

소비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제품안전관리 대폭 강화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정도별(3단계) 소비자 정보발령 시스템 구축



유아용품 등 사고발생 시 위해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 위해정보를 의무 통보토록 근거 마련

* 제조·수입·유통업자가 제품의 안전위해 및 사고정보를 보고(미신고시 가중 처벌)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안전 감시활동 강화

* 사이버 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선담 제품 안전 감시난을 배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생활공감 정책)

소비자 불만 신고품목, 정기검사 불합격 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집중 관리

* '08년 조사결과 취약품목 : 어린이용 장신구, 합성수지 유아용품, 유모차, 완구

* 안전성조사 확대 : ('08) 84품목, 1,003건 · ('09) 100품목, 3,000건



저가 수입제품, 불법·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단계별 어린이제품 안전망 가동

불법·불량 어린이용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관장 확인 물품」 확대

* 어린이용품 : ('08) 18개 품목 → ('09) 23개 품목 · ('10) 28개 품목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인간 자율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

* 전기용품·공산품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SDoC)

강제인증 대상인 신제품이 인증기준이 없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강제인증 예비제도' 추진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세계수준의 안전명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애로기술 개발 지원

* 안전설계·제조 기술,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 R&D 지원



- 동일 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품안전 기술보 고서' 제작·배포(분기별)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보호하고, 불량기업은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정기 검사를 차별화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운영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우수기업, 준우수기 업, 불량기업으로 구분

자발적 리콜 실시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증이 취소된 제품의 모델을 변경하여 재인증을 받는 병폐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불량기 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불량률 30% 이상 품목

- 전기용품 :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자식 안정기, 형 광등기구 등
- 공산품 : 비비탄총, 어린이용 장신구, 유모차, 합성 수지 유아용품 등

- 불법·불량 제품을 삼습적으로 제조·판매하거 불량률이 높은 기업은 별도 블랙리스트로 관리 하고 인증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정밀 심사 실시
- 불량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관리 및 안전성 조사 등 집중관리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시장감 시를 강화하고 모범판매 업소의 확대를 유도

계절상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 조사 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성수기 이전에 발표

‘ 조사결과 발표 : 여름제품(6월말), 겨울제품(11월 말), 장난감(4월말, 12월초)

소비자·생산자 상생협력을 위한 제품안전 사 용이행 대상을 대형마트, 사이버쇼핑몰 등 유통·판매업체로 확대

- 문구·완구점을 대상으로 「안전제품 판매 모범업 소」를 선정하고, 타 분야 유통·판매업체로 확대
-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홍보물 배포

분야별 제품안전 지침서를 개발하고 안전기준 기술지도 실시

- 분기마다 품목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 실 명회 개최
- 재해유발 가능제품(전기장판 등)과 취약부품(온도 조절기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고장진단 등의 관련기술 연구개발 사업 병행

산업수요를 반영한 계량 및 제품인증 제도 운영

법정계량단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부처의 법령·제도정비를 추진(3월)

- 국무회의 안전 상정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토 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의 정비 협력을 요청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량표시상품 적합성 사업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에 관리지침을 제 정·보급

2. 국가표준체계 정착

국가표준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실천, 기술기준의 코드화 등 국가표준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가표 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3월)

- 기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표준 실무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합 의를 도출



국가 인증제도 혁신의 지속과 통합인증마크 제도의 조기 정착

강제인증제도 간 중복인증품목에 대해 인증질차, 시험성적서 공유 등 통합 고시안 마련(6월) 및 전략적 홍보 추진

- 지경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 659개 품목 대상
- 단계별 홍보 : (1단계, '09) 도입준비 및 조기정착
· (2단계, '10) 인지도 제고 · (3단계, '11~) 글로벌 브랜드화

임의인증 품목별 중복시험 및 심사항목 등을 조사하여 동일 평가항목 간의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유도(연중)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조기 정착 시나리오)

기술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통해 규제 완화

기존 기술기준은 국제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위에 상정·조정

·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국가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 관계부처에 조정을 요청

각 부처에서 기술기준 제정시 국제·국가표준과의 부합성, 국제개선 등에 대해 국가표준실부(위)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12월)

국민생활 공감 표준화 정책 추진을 범부처로 확대

1차 여론조사('08.10)에서 발굴한 과제를 각 표준 담당과 및 해당부처에서 추진하고 범부처기 참여하는 2차 여론조사 실시(2월)

- 의료기기의 교정·표준화 등과 같은 기술기준 관련된 사항은 규제(위)에 상정하여 신속조치
- 장기적 협력이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표준 심의회를 통해 세부 표준화를 추진

녹색성장기술의 국가표준화(KS)를 위한 '그린 스탠더드 전략' 추진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순환분야의 표준화 경제성 분석을 통해 편익이 월등한 품목을 선정하고 국가표준으로 우선 제정(12월)

- 그린 스탠더드 신문 FM 선발 및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지정(6월)

KS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한 '슈퍼 KS' 도입 검토와 ISO 인증의 신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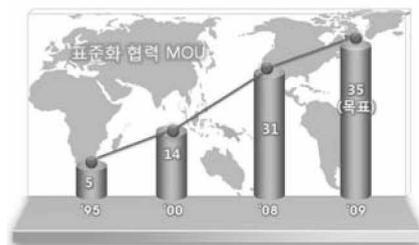
고효율·고성능의 우수 KS제품에 대해 차별화 방안마련(용역 수행 중)

- 869개 KS 품목대상 소비자여론조사 실시
- 우수인증단체에 대한 인정을 통해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표준과의 비교를 통해 품질 상향조정 방안 검토 등(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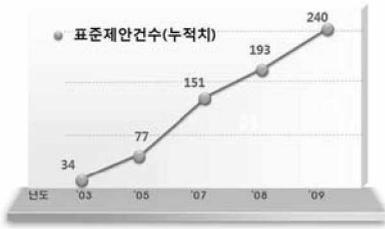
ISO 9001(인증업체 3,6만개)과 14001(1만개)의 운영요령 통합으로 인증 현황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인증심사원 정보DB모장으로 처벌강화

3. 국제표준 지배력 강화

(연도별 표준화 협력 MOU)



(국제표준 제안수 증가 추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정책위원회 상임이사국 진출 검토

IEC CB 및 SMB 임원 취임('08.11)을 계기로, IT 강국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임이사국 진출을 본격 검토 (분담금 상향 조정 등 필요)

- '09년 ISO/Council(기표원집) 및 IEC/CAB(백수현) 선거에 재진출 노력

기술위 참여 · 임원 진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익 강화

- 선진국의 표준화동향 분석을 통한 핵심 산업분야 예측 및 아국의 산업별 중요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녹색성장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표준외교 전개

녹색성장 관련 국제 표준화 회의 유치를 통한 표준외교를 전개하여 국제 의장간사 수입, 기술반영 등을 주도

- 안전성표준이 핵심인 수소에너지기술(ISO TC 197, 10월), 연료전지기술(ISO TC 105, 6월) 해양에너지기술(ISO TC 114, 5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확정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R&D-특허-표준」의 연계 지원 강화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전력IT 등 주요 전략산업

의 R&D와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

- 14대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분야에 표준 PMO를 구축(4월)하고 R&D사업의 추석평가 모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12월)
- 장비 · 부품 · 소재의 국산화로 기술경쟁력이 확보된 전략품목은 국제표준화 추진(11월)
- 전력IT 연구개발과 연계된 표준화 로드맵 이행 전략 수립(8월)

「표준특허 정책협의회」를 구성,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 표준특허 포탈 구축 등 활성화 기반 확립

- 특허청, 기표원 중심의 정책협의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표준특허지원센터(실무기관)를 설립

민간 표준 역량 강화로 사실상 표준에 대응

국가표준개발의 단계별 민간이양 계획에 따라 신규 표준개발협력기관(COSID)을 확대 지정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 ('08) 14개 → ('09) 21개 (7개 신규 지정)
- 사실상표준대응기관 확대 : 전담기관(9→12개), 위원회(26→30개), 거점기관(0→9개)

지정기관은 ASTM, IEEE 등 해외 선진 단체 표준 도입 업무를 전담하고 정부는 국제표준 중장기 전략을 수립(6월)하여 지원

- 표준개발협력기관이 해외 단체 표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0월)

글로벌 표준화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지원

표준분야 한류(韓流)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 양성

- ISO 중앙사무국과 ISO 아시아 Help Desk 운영 및 전담인력 교육 추진



- 미국(ANSI 2명, NIST 1명, ASTM 1명) 파견 외에 유럽(CENELEC), 캐나다, 호주 등에 단기 연수인력 파견 및 국제 표준전문기 양성을 위한 영 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

4. 해외 기술규제 대응

TBT 중앙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

중앙사무국의 제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

- 법적근거 확보 후 '중앙사무국 운영지침' 을 고시(6월) 하고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TBT포탈을 정부차원의 기술규제 통합관리사이트로 격상, 부처간 온라인업무 기능 강화

자유무역협정상의 기술장벽(FTA/TBT) 대응 등 양자협력 강화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상대국 정부와의 연락체계 확보하고 TBT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제 완화, 경제협력 협의

- 미국(어린이용품, CPSC), 사우디(적합성제도, SASO), 중국(정보보안, CNCA)의 담당부서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아세안과는 기술표준 협력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사업 추진(9월)

사전 예방적 TBT 대응 민관 네트워크 구축

기술규제의 시급성, 파급영향 등을 파악하는 사안별 T/F팀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지원율 위한 '현장밀착형 기술규제 일괄 지원체제' 를 가동

- 통보문, 기술규제 분석에 부처 규제담당자의 참여를 확대(12명 → 25명)하고, 통보문 전달 및 업계 의견 피드백을 위한 연락기관을 지정(65개기관)
- 4대 교역국(북미, EU, 중국, 일본)의 기술규제정책 및 주요기술규제 분석 등을 위한 규제제도 실무(위)를 신설하고 특정 규제별 '다음 로드맵' 을 작성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시험인증기관 경쟁력 강화

9개 시험기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 이행준비단계('09~'10년) : 해외공동투자, 공동브랜드 사용 등 사업 추진
- 실행단계('11년 이후) : 통합 시험인증기관의 비영리 법인화 추진

| 기술표준 2009.1